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고에 대한 문헌 연구 및 북한 관련 정책적 시사점

문 성 민* · 양 석 준**

- I. 머리말
- II. 동구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연구 필요성
- III. 경제성과 관련 기존연구의 주요 논의내용
- IV. 북한의 체제전환 및 남북통일에 대한 시사점
- V. 맺음말

국문요약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험은 이들이 체제전환과 경제통합을 함께 추진했다는 점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고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환초기의 생산 감소는 생산구조 와해 등의 공급요인이 긴축 정책 등의 수요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 초기에는 와해된 생산구조를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성장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 또한 물가 상승 원인이 국가별로 달랐던 점을 감안하여 북한도 통화량 증가, 환율 상승, 임금 상승 등 무엇이 주요 요인인가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제전환 이후 고용 감소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하락을 용인하는 노동제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금이 경직적이면 실업이 늘고 사회보장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성장에 있어서 체제전환 초기에는 거시경제 안정, 제도구축 등 체제전환 관련 요인이 중요하며 10년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는 인적·물적 투자, FDI 등 일반적인 성장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시기별로 초점을 달리하여 성장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까지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개혁 속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경제 및 통화 통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체제전환, 경제통합, 남북통일, 북한, 성장 결정요인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선임연구원
**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I. 머리말

북한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가능한 한 여러 상황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이 중국처럼 점진적으로 체제전환을 추진한다면 이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겠지만, 북한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구권(Eastern Bloc)¹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먼저, 북한이 과거 동구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처럼 급격한 정치경제 상황 변화를 맞이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경험은 초기 경제상황, 전환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할 뿐 아니라 일부 국가가 ‘체제전환’과 ‘EU와의 경제통합’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화해분위기 조성, 김정일 집권 이후 정권붕괴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인식의 확산 등으로 북한 정권의 급격한 변화를 전제로 하는 체제전환 사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동구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기존 문헌을 연구하였다. 특히, 경제적 성과와 관련한 주요 논점에 대한 문헌을 연구하여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 및 통화 통합에 적합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헌 연구 결과, 체제전환 초기의 생산 감소 요인, 성장세로의 전환을 위한 동력과 정책방안, 지역별 고용상황 차별화 요인, 성장결정요인의 시기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에 근거해 유용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구조 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동구권 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이 왜

¹ 동구권(Eastern Bloc)은 중부 및 동부유럽의 공산주의국가와 소련 및 그 위성국가를 의미한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일에 유용한 교훈과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정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경제적 성과와 관련한 기존 문헌의 논의 내용을 이슈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문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종합정리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II. 동구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연구 필요성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이들의 경험이 다양하다는 점, 일부 국가에서 체제전환과 경제통합이 함께 추진되었다는 점, 북한의 변화 가능성 및 방식이 이들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 동구 체제전환 경험의 다양성

동구권(Eastern Bloc) 국가들은 대체로 비슷한 시기(1990~1992)에 체제전환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제전환 시작 시기, 체제전환 초기의 극심한 경제적 혼란 등 일부 유사한 사항도 있으나, 체제전환 전후의 정치·경제 상황, 체제전환 속도 및 순서, 체제전환 이후 경제정책 및 성장 속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정치·경제적 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붙임1> 참조) 이들 28개국은 CEE(Central and Eastern Europe, 중부 및 동부유럽),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등으로 정치·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두 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구소련이나 유고연방, 또는 EBRD의 체제전환 보고서와 같이 6개 지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² CEE는 유럽에 위치한 구공산국가,³ CIS는 소비에트 연방 해체(1991년) 이후 독립한 10개국, 구소련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소속되었던 국가, 유고연방은 과거 혹은 현재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가입한 국가를 의미한다. 한편, 구소련 국가는 다시 지역에 따라 러시아, 발틱3국, 동부유럽, 남코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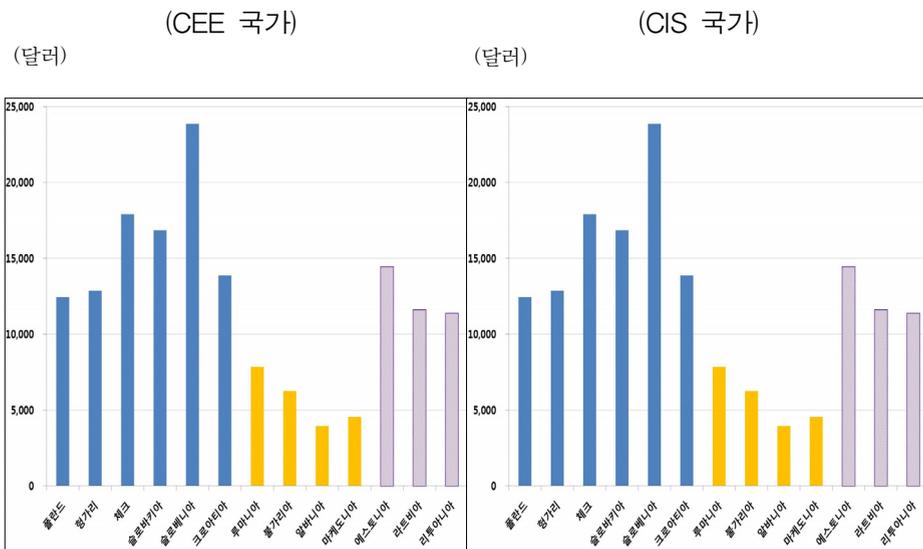
² 이외에 CESEE(Central,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등의 용어도 사용되며, CEE, 발칸반도 등은 지역적 특성이 더 많이 감안된 용어이다.

³ 러시아,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도 지역적으로는 유럽에 있으나 CEE 국가로 구분하지 않고, 구소련 또는 CIS 국가로 구분된다.

스, 중앙아시아 등으로 세분된다.

이들 국가들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력 수준에서 지역 및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들 28개 국가의 특성을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분류 방식에 따라 중부유럽(Central Europe), 남동유럽(Southeastern Europe), 러시아, 발틱3국, 동부유럽 및 남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1인당 GNI 현황(2010년 현재)



자료: World Bank, WDI

중부유럽은 동구권에서 경제력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영향과 도움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남동유럽은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들로서 서발칸의 구유고연방 국가 및 알바니아, 동발칸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을 포함하고 있다.⁴ 이들의 경제수준은 동구권의 중간 정도인 5,000달러(1인당 GNI) 내외로 CEE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소련 국가인 러시아, 발틱3국, 동부유럽 및 남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등은 경

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도 발칸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중부유럽 국가로 분류된다.

제적 상황뿐 아니라 인종, 문화, 언어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지역 간 차이가 크다. 러시아와 발틱3국의 경제력 수준은 10,000달러(1인당 GNI) 내외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동부유럽 및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의 경제력 수준은 3,000달러(1인당 GNI) 내외로 가장 낮다.

이와 같이 동구권 국가들의 정치·경제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할 때 북한과 유사한 사례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체제전환 관련 정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체제전환과 경제통합 추진

동구권 국가 중 일부는 체제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 EU 및 유로존에 가입하여⁵ 선진국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제전환 이후 이들 국가의 경험은 ‘체제전환’과 ‘경제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제전환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경제통합은 중부유럽 및 남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EU 및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안게 된 과제이다. Fabrizio et al.(2009)은 이들 국가가 경제통합을 위한 소위 ‘2차 체제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이라는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한과의 경제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 점에서 동구권 국가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들의 경험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의 근간이 되고 있는 3단계 통일이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국-홍콩의 특별행정구역(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SAR) 유형⁶의 통일을 추진할 때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 때 중국-홍콩의 SAR 유형은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이룬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를 분리·운영하는 방식의 통일 유형이다.

⁵ 2004년 8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발틱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8개국이, 2007년 1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2개국이 EU에 가입하였으며 이 중 유로화 사용국은 슬로베니아(2007), 슬로바키아(2009), 에스토니아(2011) 등이다.

⁶ 안예홍·문성민(2007), Goldman Sachs의 Kwon(2009), 남성욱(2010), Mun and Yoo(2012) 등이 이 방식의 통일을 주장하였다.

3. 북한의 변화 가능성 및 방식

최근까지의 상황으로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준비 기간이 짧고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 정권의 특성, 199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과 이에 따른 계획경제 와해 및 주민들의 시장 활동 증가⁷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권력 재편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권력을 잃게 되는 세력의 반발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반발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중국과 유사한 수준의 개혁·개방이나 동구권과 유사한 수준의 체제전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급격한 정치, 경제적 변화 가능성이나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북한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처럼 급격한 정권 교체와 체제전환이 될 개연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⁸ 이는 북한이 체제전환 이전의 동구권 국가들처럼 1인 지배에 의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이다.

결국,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과 달리 줄어들고 있는 동구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연구 노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동구권 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은 북한에서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의 경험에 대한 국내 연구가 해외 연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연구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⁷ 주민들의 시장 활동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사망의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외부로부터의 변화의 바람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⁸ 이종철(2010)은 북한에서 정권 붕괴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루마니아 또는 러시아 유형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Ⅲ. 경제성과 관련 기존연구의 주요 논의내용

1. 전환초기 경제상황 악화

가. 경제성장 관련

(1) 초기 생산급감 후 회복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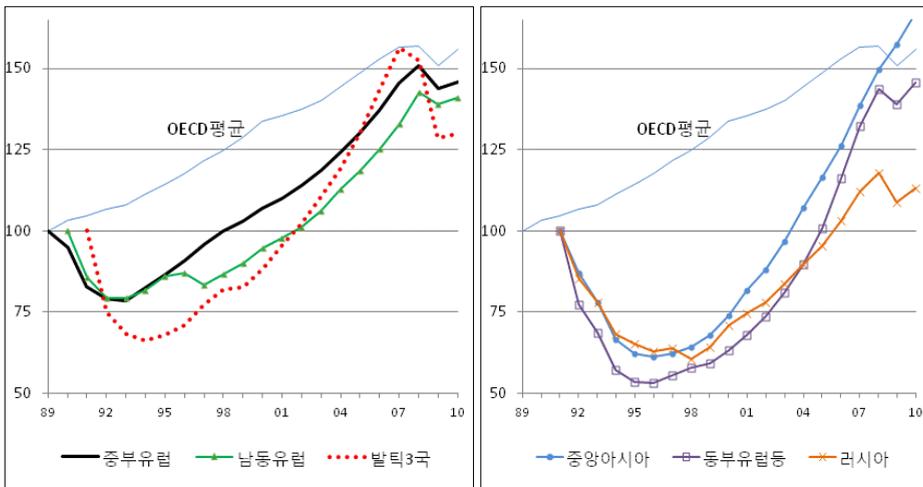
대부분의 동구 체제전환국은 체제전환 초기 4~5년간 생산 감소를 지속하다가⁹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9~15년이 지난 뒤에야 체제전환 이전수준을 회복했다.

중부유럽은 서유럽의 영향 등으로 생산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짧은 기간 안에 체제전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발트3국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폭으로 반락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초기에는 생산 감소 정도가 컸으나 최근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 2> 실질 GDP 추이 (체제전환 시작년도=100)

(중부, 남동유럽, 발트3국: CEE)

(러시아, 동부유럽 등, 중앙아시아: CIS)



자료: World Bank, WDI

⁹ Blanchard(1997), Kornai(2000) 등은 그 충격이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2) 전환초기 생산 급감 요인

체제전환 초기에 나타난 생산 감소의 정도나 지속 기간은 예상보다 강력하고 길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체제전환이 시작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해소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거의 모든 동구 체제전환국에서 급격한 생산 감소가 나타났다. Kornai(1994)는 이를 일반적인 불황과 다른 독특한 것으로서 경제제도 전반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제전환 불황(transformational recession)’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일종의 퍼즐이라고 인식되면서 생산 감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수요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견해와 ‘공급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견해의 두 가지가 있다.

‘수요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연구(Berg and Blanchard, 1994; Rosati, 1994)에서는 안정화정책 시행에 따른 총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장경제 국가에서 시행되었던 안정화정책이 심각한 생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던 경험 등을 근거로 이 견해를 비판하는 연구(Kiguel and Liviatan 1989; Calvo and Vegh 1993)가 많다.¹⁰

‘공급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연구(Blanchard and Kremer, 1997; Roland and Verdier, 1997)에서는 계획경제 시스템 붕괴에 따른 생산구조(공급자, 생산자, 소비자 등의 연결구조)가 와해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계획에 의해 가격과 거래 상대방을 지정 받던 개별 기업 및 소비자가 체제전환 이후, 거래 상대방과 가격을 스스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격 협상능력 및 거래 상대방 탐색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생산구조 와해 및 생산 급감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에 대한 가격 자유화 이후 상대가격 하락 부문의 생산 감소(Gomulka, 1992; Kornai, 1993), 국가보조금 감축, 실질이자율 상승, 경성예산제약 도입 등에 따른 신용경색(Calvo and Coricelli, 1992), 노동시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의 부문간 노동이동의 어려움(Atkeson and Kehoe, 1996), 동구권 국가들의 무역을 관장하던 CMEA(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의 와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¹¹

¹⁰ Gerard Roland,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Firms, Markets* (Cambridge: MIT Press, 2000), p. 154; Nauro Campos and Fabrizio Coricelli, “Growth in transition: What We Know, What We Don’t and What We Shoul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0, No. 3 (2002), p. 819에서 재인용.

이들 견해 중에서 ‘공급 측면’에서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Roland, 2000; Campos and Coricelli, 2002)¹²

(3) 성장세 전환 요인

성장세로의 전환은 체제전환 이후 4~5년 정도가 경과한 시기에 시작되었으며¹³ 성장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다.(Fischer, Sahay, Végh 1996a,b; de Melo et al., 1997; IMF, 2000) 한편, 성장전환을 위한 인플레이션 수준은 연간 4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⁴

물론, 인플레이션을 40% 이내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일반적인 시장경제 국가와 달리 사유화 등 핵심적인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긴축정책 및 유동성 축소는 기업의 신용경색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반대 견해도 있으나 거의 모든 실증연구에서 인플레이션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물가 등의 안정이 성장세 전환의 필수 조건일 뿐 아니라 적어도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성장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대해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¹⁶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적자 축소, 고정환율제도 등의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필요성도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Fischer, Sahay,

¹¹ Gerard Roland,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Firms, Markets*, pp. 154~157; Jan Svejnar, “Transition Economies: Performances and Challenge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 1 (2002), pp. 9~10에서 재인용.

¹² 한편, Svejnar(2002)는 모든 견해가 나름대로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견해만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¹³ Fischer, Sahay, Végh(1996b, p. 229)는 1994년을 기준으로 하여, 성장세로 전환된 국가들의 체제전환 불황 지속기간이 3.6년, 성장세로 전환되지 못한 국가들의 체제전환 불황 지속기간이 4.7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¹⁴ Bruno and Easterly(1995)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40%를 넘을 경우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¹⁵ Stanley Fischer, Ratna Sahay and C. A. Vegh, “Stabilization and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The Early Experience,”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0, No. 2 (1996), pp. 46~47에서 재인용.

¹⁶ Oleh Havrylyshyn, “Recovery and Growth in Transition: A Decade of Evidence,” *IMF Staff papers*, 48 (2001), pp. 60~68에서 재인용.

Végh, 1996a, b; IMF, 2000; Havrylyshyn, 2001)¹⁷

나. 고용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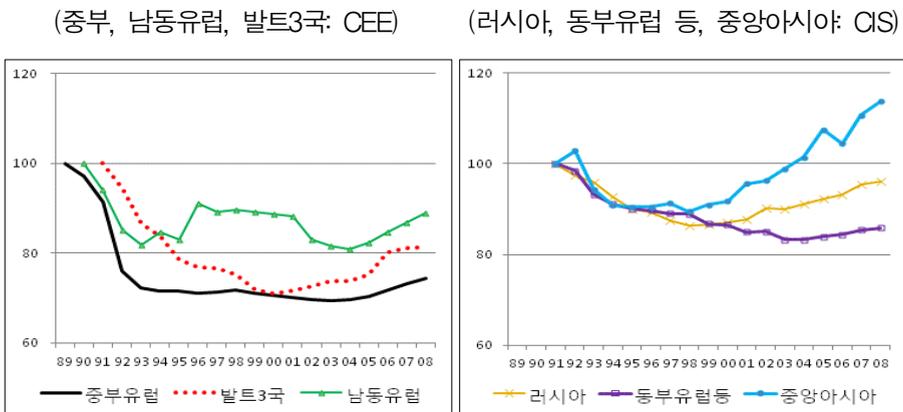
(1) 초기 급감 후 완만한 회복

고용은 L-curve 또는 U - curve 형태를 보이고 있어 J-curve 형태를 보인 경제성장과 차이가 있다. 특히, CEE 국가들은 GDP가 성장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CEE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 고용감소 폭이 컸을 뿐 아니라 회복세도 저조한 반면 CIS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 고용감소 폭이 적었을 뿐 아니라 회복세도 양호했다. 이는 경제 회복세에 있어서 CEE 국가가 CIS 국가에 비해 생산감소 폭이 적고 회복세도 양호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¹⁸

한편, CIS 국가의 고용상황이 비교적 양호했지만, 이들의 고용의 질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의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 안 된 기업, 비공식 부문, 농업 등에서의 비생산적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고용지수 추이 (체제전환 시작년도=100)



¹⁷ Strašek(1998), Drabek and Brada(1998) 등과 같이 변동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 비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¹⁸ 한편, CIS 국가의 고용감소 규모가 작다는 것은 기업 및 일자리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CEE 국가의 고용감소 규모가 크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Rutkowski, 2006)

(2) 지역간 차별화 원인

지역간(CEE 대비 CIS)의 고용상황 차별화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노동정책 또는 노동제도의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CEE 국가에서는 임금하락 대신 고용감소 정책을, CIS 국가에서는 고용감소 대신 임금하락 정책을 선택했으며¹⁹ 그 이유는 노동제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Garibaldi and Brixiova(1998)는 CIS 국가들에 비해 CEE 국가들에서 더 높은 수준의 실업 수당 및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고용보호(Cazes and Nesporova, 2003), ALMP(Active Labor Market Policies)(Rovelli and Bruno, 2007), 세금제도(Fialova and Schneider, 2009; Behar, 2009) 등도 주요 제도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전환 초기의 급격한 고용감소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이해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제전환 이전에는 공식적으로는 완전고용 상태에 있었으나 실상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의 실업(unemployment on the job, Rutkowski, 2006)’ 상태에 있었으며 체제전환이 시작된 후 기업 및 일자리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실업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 물가 관련

(1) 초기 급등 후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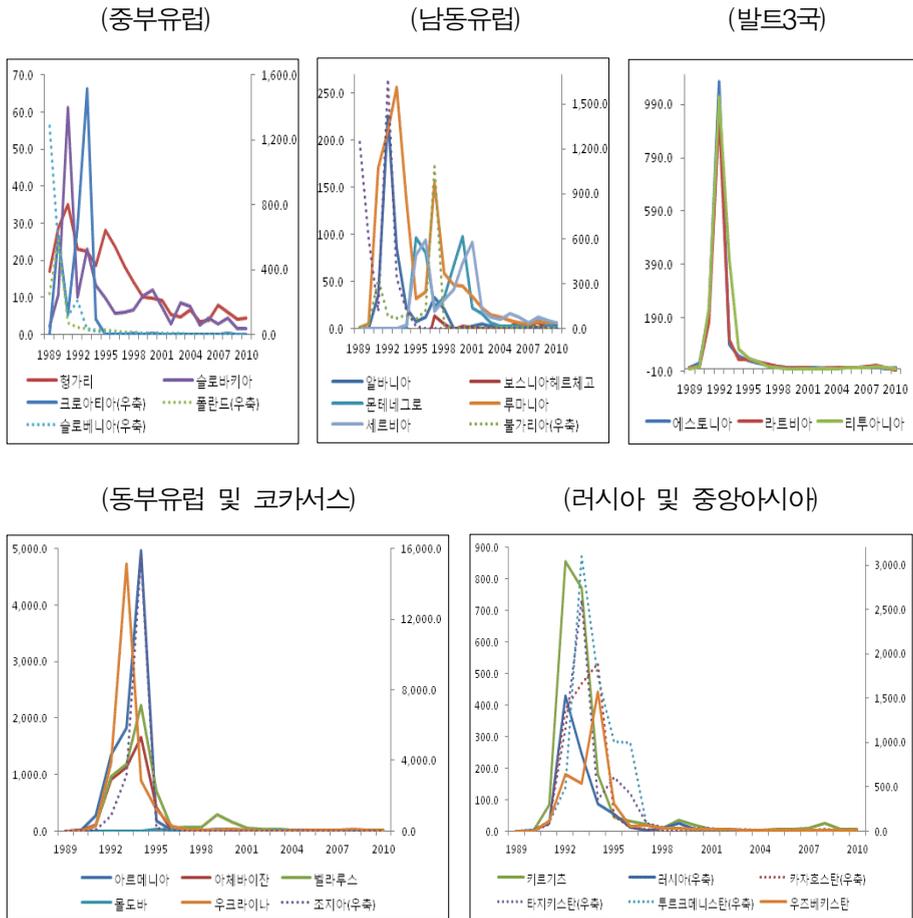
대부분 동구 체제전환국들의 물가는 전환 초기에 크게 불안한 양상을 보인 후 3년 정도 지난 1993년부터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부유럽과 발트 3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중부유럽의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의 전환초기 물가상승률이 연 30~60% 상승에 그쳐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발트3국은 전환초기 연 1,000%까지 상승하였으나 체제전환 후 2~3년여 만에 안정세로 돌아서 1998년경부터는 연 10% 이내로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¹⁹ A. Tichit, “The Optimal Speed of Transition Revisited,”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2, No. 2 (2006), p. 350에서 재인용.

<그림 4> CPI 상승률 추이

(연간, %)



자료 : EBRD

(2) 급격한 물가 상승 요인

체제전환 초기의 물가 급등 요인으로는 화폐과잉축적(monetary overhang),²⁰ 체제전환 이전의 상대가격 왜곡의 조정,²¹ 통화 공급 증가 및 재정규율의 부족,

²⁰ 화폐과잉축적(monetary overhang)은 배급제 하에서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임금 등으로 지급 받은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격통제로 인해 퇴장 화폐가 인플레이션으로 현실화되지 못하는 현상은 억압된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으로 표현된다.

²¹ 상대가격 왜곡의 조정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체제전환 초기에는 컸으나 인플레이션 안정기(moderate inflation)에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Coorey et al., 1996)

해외 물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외부 요인,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이 제시되고 있다.

체제전환 이전에 누적된 ‘화폐과잉축적’은 체제전환 초기 가격자유화와 맞물려 물가수준의 점프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많다.(Calvo and Frenkel, 1991; Maliszewski, 2000) 그러나 그 효과는 빠르게 사라졌으며(Coorey, 1996) 그 정도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Chang, 1994; Kim, 1999)²²

결국 화폐과잉축적은 체제전환 직후 한 번의 가격 점프를 설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상보다 크고 길었던 가격 점프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화폐과잉축적 이외의 요인으로는 환율 상승(Maliszewski, 2000), 체제전환 이전의 왜곡된 상대가격의 조정(Chang, 1994), 가격보조금 폐지에 따른 비용 상승(Kim, 1999)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체제전환 직후의 가격 점프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초기의 가격 점프 이후에도 2~3년 동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의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²³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자 또는 지역별로 다른 분석이 제시되고 있어 통일된 견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화 공급 증가 및 재정규율의 부족(Sahay and Végh, 1995; De Melo et. al., 1997), 해외 물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외부 요인(Kutan and Brada, 1999),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Coorey et al. 1996)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지역별 또는 국가별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경우에는 통화량 증가보다는 해외 물가 및 환율 상승(Kutan and Brada, 1999) 또는 임금 상승(Welfe, 2000) 등이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는 반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통화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Nikolić 2000, Buch 1998, Korhonen 1998)²⁴

결국, 체제전환 이후 지속된 인플레이션 요인은 시기별 및 지역별로 그 원인이

²² Kim(1999)은 1992년 1월 245%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에서 61.3%p 정도가 화폐과잉축적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였다.

²³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연 15~30%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moderate inflation)이 5년 정도 지속되었으며 대부분 연구에서는 물가 점프 이후 2~3년과 이후의 5년여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물가상승 원인을 분석하였다.

²⁴ Byung-Yeon Kim, “Modeling Inflation in Poland: A Structural Cointegration Approach,”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46, No. 6 (2008), pp. 5~6에서 재인용.

다르기 때문에 체제전환국 전체를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물가 등의 안정을 위한 안정화 정책으로는 재정규율 강화, 환율목표제, 고정환율제도 도입, 중앙은행 독립성 제고, IMF 지원 하에서 시행된 안정화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고 있다.(Fischer, Sahay, Végh, 1996a, Havrylyshyn, 2001; IMF, 2000) 특히, IMF(2000)는 IMF 지원 하에서 시행된 안정화 프로그램 등이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면서 물가안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물가상승세가 IMF 지원 하에 시행된 안정화프로그램²⁵ 시작과 더불어 둔화되기 시작하여 2년 후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안정적이라고 평가되는 범위(연 40% 이내)까지 둔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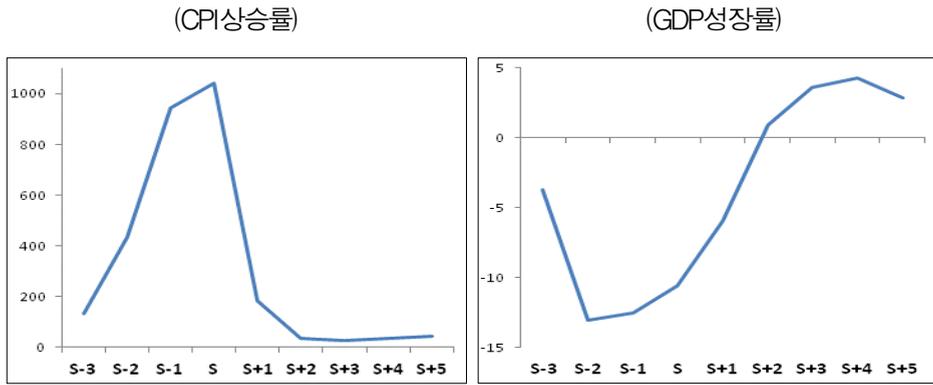
동구 체제전환국의 인플레이션 자료를 보면, 안정화 프로그램 시행년도(S)를 기준으로 작성한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PI상승률²⁶이 안정화 프로그램 시행 다음해(S+1)부터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GDP성장률²⁷도 안정화 프로그램 시행 2년(S+2) 경과시점부터 플러스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²⁵ 안정화프로그램은 1990년에 폴란드, 헝가리, 1991년에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1992년에 슬로베니아, 발트3국, 알바니아, 1993년에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1994년에 마케도니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1995년에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등에서 시행되었다.

²⁶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라트비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14개국이 포함되었다.

²⁷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몽골,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22개국이 포함되었다.

<그림 5> 안정화프로그램 시행전후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주: 1) “S”는 안정화프로그램 시행년도

2. 성장 결정요인

체제전환 이후 최근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경제성장 결정요인’이다. 이들 성장결정요인은 2000년경을 전후하여 달라지고 있다.²⁸

가. 1990년대 성장결정요인

1990년대의 성장 결정요인으로는 거시경제 안정, 초기 조건, 구조 개혁, 제도 개혁 등 체제전환 특유의 요인들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시경제 안정(macroeconomic stabilization)은 물가상승률을 일정 수준 이내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재정지출과 통화증가를 등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정책내용을 한다.(IMF, 2000) 거시경제 안정은 성장세 전환이나 지속성장 등 여러 측면에서 성장에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일치된 견해가 형성되어 있어 성장결정요인 중에서 이점이 가장 적은 요인이다.(Havrylyshyn, 2001)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재정긴축, 고정환율제, 중앙은행 독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s)은 초기 소득수준, 계획경제 지속 기간, 서유럽과

²⁸ Dragutinovic Mitrovic and Ivancev(2010)은 2000년경을 전후하여 성장결정요인이 달라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idrmuc and Tichit(2009)은 성장패턴의 구조변화가 개혁의 정도에 따라 3차례(개혁 준비→초기 개혁, 초기 개혁→완만한 개혁, 완만한 개혁→진보된 개혁)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완만한 개혁에서 진보된 개혁으로 변화된 시기가 대체로 1990년대 중반~2000년 초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의 거리, 산업화 정도 등을 의미한다. 초기조건은 체제전환초기 국가별 체제전환 정책의 선택을 다르게 하고, 그 결과 경제적 성과에 차이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de Melo et al., 1997; Heybey and Murrell, 1999, Wolf, 1999) 이러한 초기조건은 영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한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지만 (Havrylyshyn et al., 1999) 개혁 속도와 시장경제 제도 구축에 미치는 간접 영향을 통해 적어도 2000년경까지는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견해도 있다.(Falcetti et al, 2002; Cerović and Nojković, 2009)²⁹

이들 요인(거시경제 안정, 초기 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비교적 적지만 개혁, 특히 구조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에 따라 대체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은 가격 및 무역 자유화, 사유화, 기업과 금융기관을 시장경제에 맞게 개편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가격 및 무역 자유화는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고 무역장벽을 낮추는 일련의 과정이며, 사유화는 개인이 기업의 소유권을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기존 국유기업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IMF, 2000) 자유화(liberalization)와 사유화(privatization)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유화는 주로 속도의 관점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대체적으로, 체제전환 초기의 급격한 생산 감소 시기에는 자유화 속도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성장 전환 이후에는 지속적인 자유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Popov, 2007) 사유화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 개혁이 병행될 경우에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Estrin et al. 2009) 그러나 잘못된 사유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Zinnes et al. 2001) 사유화 전략으로는 소규모 사유화는 전환 초기에 빨리 진행하고, 대규모 사유화는 오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Fischer and Sahay 2000; Falcetti et al, 2006) 가장 최근 연구인 Babecký and Campos(2011)는 기존 연구 46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가격 자유화와 사유화의 효과는 거의 없고 무역 자유화만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²⁹ Cerović and Nojković(2009)은 초기조건이 빠른 개혁에 맞지 않을 경우 개혁과 제도 구축의 속도를 늦추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제도 개혁(institutional reform)은 넓게는 ‘게임의 룰’, 좁게는 ‘경제주체간의 거래를 관장하는 규칙’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소유권 보호, 규제, 거시경제 안정, 사회보장, 분쟁조정 등에 대한 공식, 비공식 제도의 질 또는 효율성의 발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생산비용과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결정하며(Efendic and Pugh, 2007) 소유권 형성, 계약이행 보장 등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 원리에 근거한 상업 및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강화한다.(Beck and Laeven, 2006) 제도 구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로로는 거래비용(North, 2006), 요소의 생산성(Eicher et al. 2006), 인적 및 물적 자본의 규모와 투자 인센티브(Gwartney et al. 2004) 등이 제시되고 있다.³⁰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 구축의 중요성은 체제전환 초기부터 점진 개혁론자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 시장경제에서의 제도의 중요성을 주장한 North(1990) 이후 체제전환 경제에서의 제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도 제도 구축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증연구에서도 종합적인 제도 구축의 질을 수치화한 인덱스를 이용하여 제도 구축과 성장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분석결과가 늘어나고 있다.(Havrylyshyn and van Rooden, 2003; Beck and Laeven, 2006; Redek and Sušjan, 2005) 다만, 제도는 개념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포괄범위도 넓어서³¹ 어떤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도의 구체적 내용, 제도 구축 순서, 여타 정책과의 선후관계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나. 2000년대 성장결정요인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인적자본 축적)·투자(물적자본 축적)·인구 등의 요소 투입, FDI 등 일반적 성장결정요인의 설명력이 증대된 반면 1990년대에 중요시되었던 체제전환 특유의 성장결정요인의 설명력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³⁰ Adnan Efendic and Pugh Geoff,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An Overview of Empirical Research with the Main Focus on Transition Economies,” *South East European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Vol. 2, No. 1 (2007), p. 26.

³¹ Beck and Laeven(2006)은 제도를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North(1990), Romer(2000) 등은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North(1990)는 제도를 사회에 적용되는 ‘게임의 법칙’으로서 공식법률(성문법, 관습법, 제반 규정), 비공식 제약(협정, 행동 기준, 개인의 행동 규칙), 그리고 이들의 이행과 관련된 특성들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으며, Romer(2000)는 제도를 사회적 하부구조(social infrastructure)라고 정의하면서 인센티브제도, 사회참여 등에 관한 문화적 요소, 정책에 대한 개인의 신뢰 등 3가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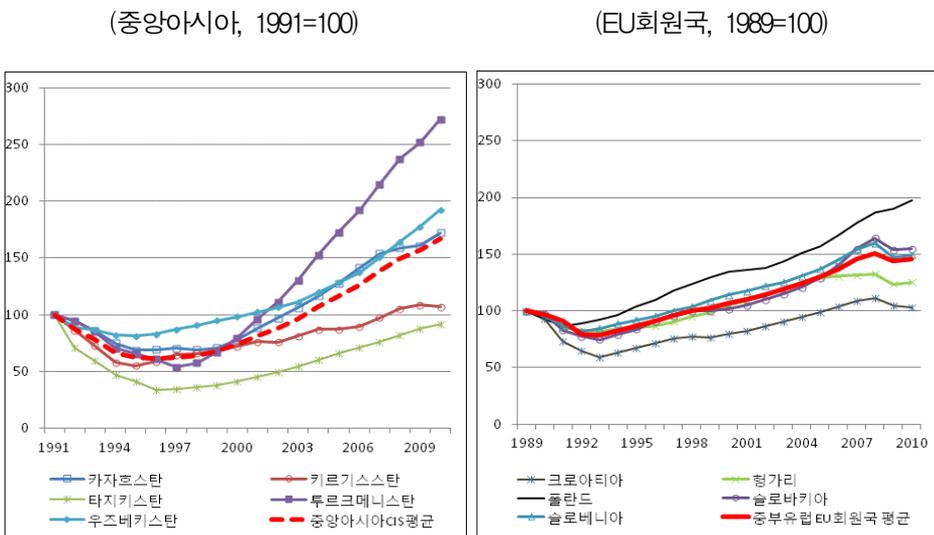
요소투입은 1990년대에는 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Havrylyshyn, 2001; Campos, 2001)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설명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다. 다만, 성장과 요소투입의 상관관계 정도가 여타 시장경제 국가들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은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Cerović and Nojković, 2009)

FDI 역시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FDI는 국내수요 증가와 함께 2000~2008년중의 동구 체제전환국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EBRD, 2010)

이외에 중앙아시아의 고성장 요인, 경제 및 통화 통합과 성장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 가입 체제전환국은 2010년 현재 체제전환 이전의 150% 수준에 도달한 데 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7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환 초기 생산 감소폭이 EU 신규 가입 체제전환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던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요인과 경제통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 6> 중부유럽 EU회원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체제전환이후 성장추이



자료 : World Bank

특히,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CIS국가들은 개혁 정도가 여타 체제전환국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의 고성장 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풍부한 자원과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요 성장요인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연구도 많다. 예를 들어 Stark(2010)는 중앙아시아의 독재 또는 권위주의 정권이 동아시아에서와 같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견해를, Davis(2010)는 낮은 수준의 경제개혁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견조한 경제성장이 더딘 개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견해를, Havrylyshyn(2008)은 CIS 국가들의 경우 개혁 실적이 부진하지만 2000년에 들어 최소 기준의 개혁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체제전환국의 경제 및 통화 통합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하고 있으나 경제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 참조)

3. 경제 및 통화 통합의 효과

체제전환국 중에서 발틱3국 및 중부유럽(크로아티아 제외) 7개국 등 10개 국가가 2004년 및 2007년 EU에 가입하였으며,³² 이들 중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2007~2011년에 걸쳐 유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³³

이들 국가의 경제통합 및 통화통합 효과는 분석가능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위기 등으로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2008년 이후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가. 경제통합 효과

경제통합의 효과는 실적분석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통화통합은 무역 증대, FDI 유입 등 인적 및 자본 축적 등을 통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합 국가들 간에 소득 수렴이 나타난다는 전통적 무역이론(Viner, 1950)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통

³² 2004년 5월에 Estonia, Latvia, Lithuania, Poland, Czech Republic, Slovakia, Slovenia, Hungary 등 8개국이 2007년 1월에 Bulgaria, Romania 등 2개국이 EU에 가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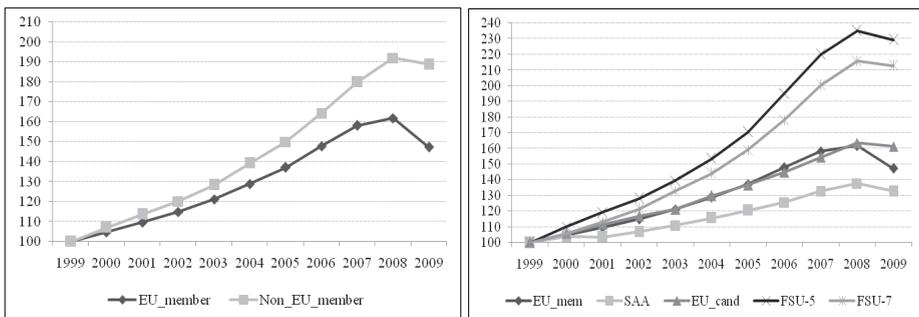
³³ 슬로베니아는 2007년부터, 슬로바키아는 2009년부터, 에스토니아는 2011년부터 유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합되는 국가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수렴 여부가 달라진다고 견해를 보이고 있다.³⁴

EU에 가입한 체제전환국의 소득수렴 여부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는 대체로 그 속도는 느리지만 소득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³⁵

그러나, EU와의 경제통합이 이들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을 증진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Prochniak and Rapacki, 2008)와 부정적인 견해(Dragutinovic- Mitrovic and Ivancev, 2010)로 나뉘어 있다. 이들 연구는 분석 방법의 차이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비교대상 국가들이 다른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Prochniak and Rapacki(2008)는 EU 회원국 전체를, Dragutinovic-Mitrovic and Ivancev(2010)는 체제전환국 전체(27개국)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림 7> 동구 체제전환국의 성장을 추이(EU 가입국 대비 미가입국 비교) (1999=100)



주: EU_mem 은 Estonia, Latvia, Lithuania, Poland,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Hungary, Romania, Bulgaria, Slovenia 등을, SAA는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SAA)에 가입한 크로아티아와 마케도니아 등을, EU-cand는 가입이 예상되는 Bosnia and Herzegovina, Serbia, Albania 등을 FSU-5 및 FSU-7은 EU 가입 절차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구소련 국가들을 의미

자료: EBRD 데이터베이스, Dragutinovic-Mitrovic and Ivancev(2010) p. 17~18에서 재인용

³⁴ 전통적 무역이론(Viner, 1950)에서 경제통합이 경제발전 수준의 실질 수렴을 이끈다는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이 제시되었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통합되는 국가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수렴 여부가 달라진다고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동질적인 집단(homogeneous group)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제통합에서만 소득수준 수렴이 나타나며, 이질적 집단(heterogenous group)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제통합에서는 실질소득의 수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Baumol, 1986) 경제통합이 경제발전 수준의 비대칭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견해(Krugman, 1991)가 제시되기도 하였다.(Vojinovic et al., 2010, p. 308; Rapacki and Prochniak, 2009, p. 2에서 재인용)

³⁵ European Commission(2001), Wagner and Hlouskova(2002), EEAG(2004), Kaitila(2004), Kutan and Yigit(2004, 2005), Varblane and Vahter(2005), Próchniak(2008), Vojinović and Oplotnik(2008) 등 많은 연구에서 CEE 국가들의 소득수렴 여부에 대해 실증 분석 한 결과 수렴 기간,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렴이론이 성립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Vojinović et al., 2009, p. 129에서 재인용)

결국, EU에 가입한 10개 체제전환국(CEE-10)은 기존 EU 회원국(EU-15) 국가들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높지만 여타 체제전환국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CEE-10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EU-15 국가들과 성장 경로가 비슷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도 EU에 가입하지 않은 체제전환국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통합의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⁶

나. 통화통합 효과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은 3개 국가에 불과하고 가입 이후 기간도 짧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통화통합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EU에 가입한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이들이 유로화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편익과 비용을 추산한 연구가 일부 있다.

이들의 평가는 유로존 전체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유로존의 통화통합 효과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2007년까지는 통화통합에 따른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08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이후에는 비용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것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De Grauwe 2011, Razin and Rosefield, 2012, Lin and Treichel, 2012)

이러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EU에 가입한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도 통화통합에 따른 비용이 기존 연구의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통화통합으로 인해 독자적인 통화 및 환율정책 수단을 상실하는 데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Jones and Witte, 2011; Bancevičius, 2011) 특히 최근의 위기를 고려할 때 재정통합에 따른 지원 및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전환국의 경기 사이클(business cycle)이 여타 유로국가들과 다를 수 있어 독자적인 정책수단 상실에 따른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³⁶ 발틱3국은 2008년경부터, 여타 EU가입 체제전환국은 2009년부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IV. 북한 체제전환 및 남북통일에 대한 시사점

1. 체제전환에 따른 혼란 완화 방안

가. 체제전환 초기 경제상황 예상

북한은 계획경제 부문이 사실상 붕괴수준에 있으며, 시장경제 부문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적 혼란의 크기와 진행 과정이 동구 체제전환국과는 다르게 나타날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이 계획경제 제도 하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성적인 시장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동구권 국가들에서 나타난 체제전환 초기의 생산 및 고용 감소, 물가 상승 등의 경제적 혼란이 일정 정도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 느슨하게 고용돼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산 및 고용 감소가 불가할 것이다. 또한, 물가의 경우에도 시장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 체계에 맞게 가격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그 충격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 최근 10여년간 지속돼 온 북한의 시장물가 상승 추세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화를 긴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이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까지는 상당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제전환 이후 북한에서 생산과 고용이 급감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 물가안정을 달성하여 경제가 성장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생산급감 완화 방안

생산 급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되면서 와해된 생산구조를 시장경제에 맞게 재정립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공급측면’, 즉 생산구조 와해가 생산 급감의 주요 원인이라는 문헌 연구 결과에 근거한 판단이다. 시장경제에 맞는 생산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해 각 기업이 시장경제에 맞게 거래상대처를 모색하고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시장정보 제공, 거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도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 고용안정 방안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임금 감소를 용인하여 고용 감소를 최소화하는 정책방안 선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용 상황이 비교적 양호했던 CIS 국가들의 고용정책을 감안한 것이다. CEE 국가에서는 고용보장, 실업보호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임금감소를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반해 CIS 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용 감소가 적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용 감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경제상황에 따라 신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성장세 전환 및 물가안정 방안

성장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재정규율 강화,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고정환율제도 등의 제도적 보완과 일정 정도의 긴축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물가상승 원인, 긴축정책의 영향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동구 체제전환국의 물가상승 요인이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북한 체제전환의 경우에도 물가상승 원인이 통화량증가, 환율상승, 임금상승 등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긴축정책이 생산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를 감안하여 안정화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를 생산 링크 재구축 및 시장 메커니즘 작동 시작 단계에서 시행하고, 와해된 생산구조가 시장경제에 맞게 재정립되기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적 재정·금융정책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안정화 프로그램 시행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생산 지원책 마련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장기성장을 위한 정책방안 및 통합 방안

가. 장기성장을 위한 정책방안

북한의 장기 성장을 위한 정책은 시기별로 초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험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경제구조 변화 시기와 변화 이후에 성장 결정요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시기별로 다른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구조 변화 시기에는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정화, 구조 개혁, 제도 개혁 등 체제전환 특유의 요인들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³⁷ 물가안정을 의미하는 안정화는 성장세 전환 뿐 아니라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구조 및 제도 개혁은 북한경제의 초기조건에 적합한 수준에서 속도와 순서를 고려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구조 변화 이후 시기에는 인적·물적 투자, FDI 등 일반적 경제성장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일반적인 시장경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성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유화와 사유화를 의미하는 구조 개혁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구조 개혁이 경제구조 변화 전후 모든 시기에 있어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연구도 상당히 많다. 최근에는 구조 개혁과 제도 개혁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구조 개혁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 남북한 경제 및 통화 통합 방안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남북한 경제 및 통화통합을 추진하더라도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은 남북한의 소득수렴 현상이 나타나면서 북한지역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으며, 통화통합은 북한지역의 독자적인 통화 및 환율 정책 수단을 상실하는 비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³⁷ 주요 성장 결정요인인 초기조건은 정책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V. 맺음말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의 다양성과 경제 및 통화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통일에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동구권 국가들은 체제전환 이후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겪었다. 생산은 전환 초기에 급감한 후 5년여가 경과하면서 성장세로 전환하는 J-curve 형태를 보였으며, 고용은 급감한 후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³⁸ L-curve 형태를 보였다. 물가는 초기에 급등한 후 3년여 동안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공통된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 및 개별 국가별로 보면 초기 상황뿐 아니라 전환 이후의 개혁 실적, 경제성장 속도, 고용 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과 관련 논의에 대한 문헌을 연구한 결과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환초기 생산 급감 요인, 성장세 전환 동력, 지역별 고용상황 차별화 요인, 성장 결정요인의 시기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전환초기 생산 급감은 생산구조 와해에 따른 공급측면 요인이 안정화 정책에 따른 수요 감소보다 더 주요한 요인이며 성장세 전환 동력으로는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전환 초기 생산 급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화 정책을 통해 물가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고용상황 차별화는 각 지역별로 시행된 노동정책의 차이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CEE 국가에서는 임금을 경직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CIS 국가들은 임금 하락을 용인함에 따라 고용 감소가 적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임금 감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탄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성장결정요인은 체제전환 초기에는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이 중요하며 10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는 인적·물적 투자, FDI 등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성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조 개혁이 경제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일에 대한 몇 가

³⁸ 다만, 중앙아시아는 체제전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할 경우 전환 초기에 나타나는 생산 감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와해된 생산구조를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산구조 정립을 위한 제도 구축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 다만, 물가상승 원인이 통화량 증가, 환율 상승, 임금 상승 등으로 국가별로 달랐던 점을 감안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정책방안 모색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용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하락을 용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이 시기별로 달랐던 점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초점을 달리하여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까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개혁이 개혁 속도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제 및 통화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유럽 경제위기 이후 상황까지를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헌 연구를 통해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북한에 적용하려면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 경제상황과 이들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당시 경제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암시장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화폐과잉축적(monetary overhang) 현상이나 시장가격에 대한 이해가 동구권 국가들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북한의 체제전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동구 체제전환국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북한 경제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접수: 4월 30일 ■ 심사: 5월 30일 ■ 채택: 6월 1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Blanchard, Olivier. *The Economics of Post-Communist Transi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7.
- EBRD. *Transition Report*. 2007, 2010.
-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Roland, Gerard.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Firms, Markets*. Cambridge: MIT Press, 2000.

2. 논문

- 안예홍·문성민. “통일이후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291호. 2007.
- 이종철.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의 비교 고찰 : 정권 붕괴 유형 및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17권 제3호. 2010.
- Atkeson, A. and P. J. Kehoe. “Social Insurance and Transi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37. 1996.
- Babecký, Jan and Nauro F. Campos. “Does Reform Work? An Econometric Survey of the Reform - Growth Puzzl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9, No. 2. 2011.
- Badinger, Harald. “Growth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41, No. 1. 2005.
- Bancevičius, Rokas. “New EU Member States and the Euro: Economic Readiness, Benefits and Costs.” *Empirica*. Vol. 38, No. 4. 2011.
- Baumol, William J.. “Productivity Growth, Convergence, and Welfare: What the Long-Run Data Show.”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86.
- Beck, Thorsten and Luc Laeven. “Institution Building and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11, No. 2. 2006.
- Behar, Alberto. “Tax Wedges, Unemployment Benefits and Labour Market Outcomes In the New EU Members.” *Czech Economic Review*. Vol. 3, No. 1. 2009.
- Berg, Andrew and Olivier Jean Blanchard. “Stabilization and Transition: Poland, 1990-91.” *The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Vol. 1. 1994.
- Blanchard, Olivier and Michael Kremer. “Disorganiz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No. 4. 1997.
- Boeri, T. and K. Terrel.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Labor Reallocation in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 1. 2002.

- Bruno, Michael and William Easterly. "Inflation Crises and Long-Run Growth."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1517, 1995.
- Buch, C.. "Toward Universal Banking – Risks and Benefits for Transition Economies, Competition and Convergence in Financial Markets: The German and Anglo-Saxon Models." *Advances in Finance, Investment, and Banking and Finance Series*. 5. 1998.
- Calvo, Guillermo and Carlos Vegh. "Exchange Rate Stabilization under Imperfect Credibility." Helmut Frisch and Andreas Woergotter (eds.). *Proceedings from IEA Conference on Open-Economy Macroeconomics*. London: McMillan, 1993.
- Calvo, Guillermo and Fabrizio Coricelli. "Stabilizing a Previously Centrally Planned Economy: Poland 1990." *Economic Policy*. No. 14. 1992.
- _____. "Output Collapse in Eastern Europe: The Role of Credit." *IMF Staff Paper*. Vol. 40, No. 1. 1993.
- Calvo, Guillermo and Jacob Frenkel. "From Centrally-Planned to Market Economies: The Road from CPE to PCPE." *IMF Working Paper*. Vol. 91, No. 17. 1991.
- Campos, Nauro F.. "Will the Future be Better Tomorrow? The Growth Prospects of Transition Economies Revisited."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9, No. 4. 2001.
- Campos, Nauro and Fabrizio Coricelli. "Growth in Transition: What We Know, What We Don't and What We Shoul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0, No. 3. 2002.
- Cazes, Sandrine and Alena Nesporova.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its Effect on Labour Market Performance." Geneva: ILO, 2003.
- Cerović, Božidar and Aleksandra Nojković. "Transition and Growth: What Was Taught and What Happened." *Economic Annals*. Vol. 54, No. 183. 2009.
- Chang, Gene Hsin. "Monetary Overhang: Do Centrally Planned Economies Have Excessive Money Stock?"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 12, No. 2. 1994.
- Commander, S. and F. Coricelli. "Unemployment, Restructuring, and the Labor Market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EDI Development Studies*. 1995.
- Commander, S., L. Liberman, and R. Yemtsov.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Dynamics in Russia."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167. 1993a.
- _____. "Wage and Employment Decisions in the Russian Economy."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205. 1993b.
- Coorey, S., M. Mecagni, and E. Offerdal. "Disinfl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The Role of Relative Price Adjustment." *IMF Working Paper*. 138. 1996.

- Davis, Jason S. "Writing Sample: Uzbekistan and Other Post-Soviet Limited Reformers: The Political Economy of Exogenously-Determined Growth." 2010. Mineo.
- De Grauwe, Paul. "International Money: Postwar Trends and Theories." OUP Catalogue. 2011.
- De Melo, Martha, Deniz Cevdet, and Alan Gelb. "From Plan to Market: Patterns of Transition." Mario Bldjer and Marko Skreb Cambridge (ed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Massachuset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Djankov, Simeon and Peter Murrell. "Enterprise Restructuring in Transition: A Quantitative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No. 40, Vol. 3. 2002.
- Drabek, Zdenek and Josef C. Brada. "Exchange Rate Regimes and the Stability of Trade Policy in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6, No. 4. 1998.
- Dragutinovic Mitrovic, Radmila and Olgica Ivancev. "Driving Forces of Economic Growth in the Second Decade of Transition." *Economic Annals*. Vol. 185. 2010.
- Efendic, Adnan and Geoff Pugh.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An Overview of Empirical Research with the Main Focus on Transition Economies." *South East European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Vol. 2, No. 1. 2007.
- Eicher, Theo, Cecilia García Peñalosa, and Utku Teksoz. "How Do Institutions Lead Some Countries To Produce So Much More Output per Worker than Others?" *Institutions,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2006.
- Estrin, Saul, Jan Hanousek, Evžen Kočenda and Jan Svejnar. "The Effects of Privatization and Ownership in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7, No. 3. 2009.
- Fabrizio, Stefania, Daniel Leigh, and Ashoka Mody. "The Second Transition: Eastern Europe in Perspective," *IMF Working Paper*. WP/09/43. 2009.
- Falcetti, Elisabetta, Martin Raiser, and Peter Sanfey. "Defying the Odds: Initial Conditions, Reforms, and Growth in the First Decade of Transi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0. 2002.
- Falcetti, Elisabetta, Tatiana Lysenko, and Peter Sanfey. "Reforms and Growth in Transition: Re-examining the Evidenc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4, No. 3. 2006.
- Fialova, Kamila and Ondřej Schneider.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ir Effect on Labor Market Performance in the New EU Member Countries."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47, No. 3. 2009.
- Fidrmuc, Jan and Ariane Tichit. "Mind the break! Accounting for Changing Patterns of Growth during Transition." *Economic Systems*. Vol. 33, No. 2, 2009.

- Fischer, Stanley and Alan Gelb.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 Fischer, Stanley, Ratna Sahay, and C. A. Vegh. "Stabilization and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The Early Experience."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0, No. 2. 1996a.
- _____. "Economies in Transition: The Beginnings of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6, No. 2. 1996b.
- Fischer, Stanley and Ratna Sahay. "The Transition Economies after Ten Yea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7664. 2000.
- Garibaldi, Pietro and Zuzana Brixiova.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Unemployment Dynamics in Transition Economies." *IMF Staff Papers*. Vol. 45, No. 2. 1998.
- Gomulka, Stanislaw. "Polish Economic Reform, 1990-91: Principles, Policies and Outcom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6, No. 3. 1992.
- Grogan, L. and L. Moers. "Growth Empirics with Institutional Measures for Transition Countries." *Economic Systems*. Vol. 28. 2001.
- Gwartney, James D., Randall G. Holcombe, and Robert A. Lawson. "Economic Freedom, Institutional Quality, and Cross-Country Differences in Income and Growth." *Cato Journal*. Vol. 24. 2004.
- Havrylyshyn, Oleh. "Recovery and Growth in Transition: A Decade of Evidence." *IMF Staff papers*. 48. 2001.
- _____. "Fifteen Years of Transformation in the Post-Communist World." *The Cato Institute*. November 7. 2007.
- _____. "Growth recovery in CIS Countries: the Sufficient Minimum Threshold of Reform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50, No. 1. 2008.
- Havrylyshyn, Oleh, Julian Berengaut, Marta de Castello Branco, Valerie Mercer-Blackman, Ron Van Rooden, and Thomas A. Wolf. "Growth Experience in Transition Countries 1990 - 1998." *IMF Occasional Paper*. 184. 1999.
- Havrylyshyn, Oleh and Ron van Rooden. "Institutions Matter in Transition, But so do Policie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5, No. 1. 2003.
- Henrekson, Magnus, Johan Torstensson, and Rasha Torstensson. "Growth Effects of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1, No. 8. 1997.
- Heybey, Berta and Peter Murrell.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he Speed of Liberalization During Transition." *Journal of Policy Reform*. Vol. 3, No. 2. 1999.
- Hudson, M. "Fading Baltic Miracle." *The International Economy*. Vol. 22, No. 1. 2008.
- IMF. "Transition Economies: An IMF Perspective on Progress and Prospects." *IMF Issues Briefs*. 00/08. 2000.

- Jones, Jason and Mark David Witte. “Financial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the Expanded EU.” *Atlantic Economic Journal*. Vol. 39, No. 1. 2011.
- Kiguel, Miguel A. and Nissan Liviatan. “The old and the New in Heterodox Stabilization Programs : Lessons from the 1960s and the 1980s.”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323. 1989.
- Kim, Byung-Yeon. “The Income, Savings, and Monetary Overhang of Soviet Household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7, No. 4. 1999.
- _____. “Modeling Inflation in Poland: A Structural Cointegration Approach.”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46, No. 6. 2008.
- Korhonen, Iikka. “A Vector Error-Correction Model for Prices, Money, Output and Interest Rates in Russia.” *Economics of Transition*. Vol. 5. 1998.
- Kornai, János. “The Evolution of Financial Discipline under the Postsocialist System.” *Kyklos*. Vol. 46, No. 3. 1993.
- _____. “Transformational Recession: The Main Caus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9, No. 1. 1994.
- _____. “Ten Years after ‘The Road to a Free Economy’: The Author’s Self-Evaluation.” *Economic Systems*. Vol. 24, No. 4. 2000.
- Kutan, Ali M. and Josef C. Brada. “The Evolution Of Monetary Policy In Transition Economies.” *ZEI Working Paper*. B99-19. 1999
- Kwon, Gooho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I).” *Gola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188. 2009.
- Lin, Justin Yifu and Volker Treichel. “The Unexpected Global Financial Crisis: Researching its Root Caus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2012.
- Maliszewski W. S.. “Central Bank Independence in Transition Economies.” *Economics of Transition*. No. 8. 2000.
- Mun, Sung Min and Byoung Hark Yoo. “The Effects of The Effects of Inter-Korean Integration Type on Economic Performance: the Role of Wage Policy.”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 26, No. 3. 2012.
- Nikolić, Milan. “Money Growth - Inflation Relationship in Postcommunist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8, No. 1. 2000.
- North, Douglass C..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Academic Foundation, 2006.
- Popov, Vladimir. “Shock Therapy versus Gradualism Reconsidered: Lessons from Transition Economies after 15 Years of Reform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9. 2007.
- Próchniak, Mariusz and Ryszard Rapacki. “Beta and Sigma Convergence in the Post-Socialist Countries in 1990-2005.” *National Bank Of Poland*. 8-9. 2008.
- Raiser, Martin, Christian Haerpfer, Thomas Nowotny and Claire Wallace. “Social

- Capital in Transition: A First Look at the Evidence.” *EBRD working paper*. 61. 2001.
- Razin, Assaf and Steven Rosefielde. “What Really Ails the Eurozone?: Faulty Supranational Architecture.” *Contemporary Economics*. Vol. 6, No. 4. 2012.
- Redek, Tjaša and Andrej Sušjan. “The Impact of Institutions on Economic Growth: the Case of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Issues*. 2005.
- Roland, Gerard and Thierry Verdier. “Transition and the Output Fall.” *CEPR discussion paper*. 1636, 1997.
- Romer, David. “Keynesian Macroeconomics without the LM Curv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7461. 2000.
- Rosati, Dariusz K.. “Output Decline during Transition from Plan to Market: a Reconsideration.” *Economics of Transition*. Vol. 2, No. 4. 1994.
- Rovelli, R. and R. Bruno. “Labor Market Policies and Outcomes: Cross Country Evidence for the EU-27.” *IZA Discussion Paper*. 3161. 2007.
- Rutkowski J.. “Labour Market Developments During Economic Transi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894. 2006.
- Sahay, Ratna and Carlos Végh. “Dollariz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IMF Working Paper*. 1995.
- Schadler, Susan, Ashoka Mody, Abdul Abiad, and Daniel Leigh. “Growth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IMF Occasional paper*. 252. 2006.
- Stark, Manuel. “The East Asian Development State as a Reference Model for Transition Economies in Central Asia -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Exogeneous Constraints.” *Economic and Environment Studies*. Vol. 10, No. 2. 2010.
- Stiglitz, Joseph E.. “Whither Reform: Ten Years of Transition.”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999.
- Strašek, Sebastjan. “The Exchange-Rate Regime in the Transition Period.”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36, No. 3. 1998.
- Svejnar, Jan. “Transition Economies: Performances and Challenge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 1. 2002.
- Tichit, A.. “The Optimal Speed of Transition Revisited.”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2, No. 2. 2006.
- Vegh C. A.. Gramont and Ratna Sahay. “Dollariz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IMF Working Papers*. 95/96. 1995.
- Viner, Jacob. “The Customs Union Issu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ew York, 1950.
- Vojinović, Borut, Sanjaya Acharya, and Mariusz Próchniak. “Convergence Analysis among the Ten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Vol. 50, No. 2. 2009.

- Welfe, Aleksander. “Modeling Inflation in Poland.” *Economic Modelling*. Vol. 17, No. 3. 2000.
- Wolf, Holger. “Transition Strategies: Choices and Outcomes.” *Princeton Studies International Finance*. Vol. 85. 1999.
- Grigory, Yavlinsky and Braguinsky Serguey. “The Inefficiency of Laissez-Faire in Russia: Hysteresis Effects and the Need for Policy-Led Transforma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9, No. 1. 1994.
- Zettelmeyer, Jeromin. “The Uzbek Growth Puzzle.” *IMF Staff Papers*. Vol. 46, No. 3. 1999.
- Zinnes, C., Y. Eilat, J. Sachs. “The Gains from Privatiz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is ‘Change of Ownership’ Enough?”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Papers*. 48. 2001.

3. 기타자료

- 남성욱. “3대 통일 시나리오와 통일재원.” 한나라당 TF 발제문. 2010.
- EBRD. Transition Report Database. <<http://www.ebrd.org>>.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붙임 1>

동구권 체제전환국 구분

	체제 전환 시작 연도	C E E	C I S	유고연방		발칸반도	E U	유로존	구 소 련					
				구 유 구	신 유 고				러 시 아	발 틱 3 국	동 부 유 럽	남 코 카 서 스	중 앙 아 시 아	
중부유럽	폴란드	'90	○				○							
	헝가리	'90	○				○							
	체코	'91	○				○							
	슬로바키아	'91	○				○	○						
	슬로베니아	'90	○		○		○	○	○					
	크로아티아	'90	○		○		○							
남동유럽	루마니아	'91	○				○	○						
	불가리아	'91	○				○	○						
	알바니아	'91	○				○							
	마케도니아	'90	○		○		○							
	세르비아	'90	○		○	○	○							
	몬테네그로	'90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90	○		○		○							
발틱 3국	에스토니아	'92	○				○	○	○		○			
	라트비아	'92	○				○	▲	○		○			
	리투아니아	'92	○				○	▲	○		○			
러시아	'92		○						○	○				
동부유럽 및 코카서스	벨라루스	'92		○						○		○		
	몰도바	'92		○						○		○		
	우크라이나	'92		○						○		○		
	아르메니아	'92		○						○			○	
	아제르바이잔	'92		○						○			○	
	조지아	'92								○			○	
중앙 아시아	카자흐스탄	'92		○						○				○
	타지키스탄	'92		○						○				○
	투르크메니스탄	'92		△						○				○
	우즈베키스탄	'92		○						○				○
	키르기스스탄	'92		○						○				○

○:회원국 △: 준회원 ▲: ERMII 협정국

Abstract

A Survey on Economic Performance of the Eastern Bloc after Transi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Sung-Min Mun and Seok-Jun Yang

The economic transition of the Eastern Bloc has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 in preparing the transi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not only because of the heterogeneity among its members but also because of their pursuit of both economic transi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EU. In this sense, this study surveys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ir economic performance and draws some policy lessons. First, the transitional recession is mainly caused by supply factors, such as production chain failures, rather than by demand factors, such as fiscal tightening. Therefore, it is crucial to rebuild the production chains to support the market economy. Second, price stability plays a key part in a return to growth. When designing measures to stabilize pric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auses of inflation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ranging from increased money supply and rising exchange rates to wage increases. Third, wage reductions can be considered to alleviate the initial decline in employment. Fourth, macroeconomic stability and economic institutions are the main determinants of growth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while FDI and capital accumulation become important after about a decade into the transition. In light of this, it is critical to come up with ways to ensure sustainable growth. Meanwhile, further studies are needed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ce of reform and economic growth and on the effects of economic and monetary integration, which remain as contentious issues.

Key Words: economic transition, economic integration, Unification, North Korea,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